

“청년 취업 늘고, 실업 줄어”

청년 고용률, 42.2%... 전년비 1.0%p ↑ · 청년 실업률, 9.8%... 전년비 2.5%p ↓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시험이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눈길을 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8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8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000명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42.2%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금융·보험 같이 임금수준이나 직적인 측면에서 좋은 분야의 취업이 활발해지면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증가했다. 아울러 평창동계 올림픽 같은 특수한 상황 덕분에 예술·스포츠나 협회·단체 등에서 청년 취업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크게 둔화했다.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3000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0.4%) 증가했다. 8년1개월 만에 최저 증가 폭이다.

반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이나 농업어업의 취업자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며 “2월에 강추위와 폭설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가 취업자수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2월 청년 실업자는 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는 2.5%포인트 하락한 9.8%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월 9.0%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빈 과장은 “특이한 요인 하나를 보 통 2월 초에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의 접수기간이 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실업자에 포함이 됐다”며 “하지

만 올해는 접수기간이 2월20일 이후로 미뤄져 2월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취업준비에서 실업으로 돌아갈 분들이 실업으로 오지 않고 취업준비로 남아 있다”며 “그래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하락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2월 구직단념자는 54만2000명으로 2014년 기준변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구직단념자는 대부분 취업준비생과 결한다. 과거 구직활동을 하거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현재 취업준비를 하면서 현재 구직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빈 과장은 “공무원시험 접수기간이 2월말로 연기되면서 이들이 취업준비 또는 구직단념 상태로 현재 비경

제활동상태에 남아 있어 구직단념자가 증가한 것”이라며 “앞으로 취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생은 2월 말 현재 67만2000명이다. 지난해 60만2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7만명이 증가했다. 현재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빈 과장은 “(공무원시험 응시자 중) 청년은 13만~15만명 정도로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취업준비생은 아닐 수 있다”며 “이미 취업을 했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3월에 기업·공공부문 채용 시즌이 본격화하면 청년 실업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스시스

장수·임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수(장계) 및 임실 예코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추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캄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시는 전북개발공사로서, 주택 위치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23번지 일원 및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21번지 일원 등 두 군데로,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장수와 임실 각각 전용면적 50A형 1세대씩으로 총2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

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약자족(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한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고득점 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성민 기자



무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

습식 가공실 등으로 조성 49종 기계 설비 갖춰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14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백경태 도의원, 무주경찰서 윤준섭 서장, 농업인학습단체 대표, 농·식품가공교육 수료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테이프 커팅, 시설견학, 사과즙 시제품 시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청 건설교통과 김기범 담당(지방공기업사업)과 ㈜크린텍 이재완 대표가 가공센터 건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

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495㎡ 규모로 조성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2016.5.~2017.12.)는 습식 가공실과 건식가공실로 조성되어 있으며 49종의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주스와 짬, 퓨레, 분말과 환류 생산이 가능해 앞으로 사과와 오미자, 천마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생산은 물론, 가공기술 개발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공창업 코칭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정위, 오너 차명주식 보유 사실 숨긴 부영 검찰 고발

오너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부영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준근 부영 그룹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계열사 5곳을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이 회장은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회사 임원에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의 부인인 나 모씨도 198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회사 임원에 명의 신탁했다.

이들 회사 중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회사 임원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에 주

식소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도 허위 공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집단현황을 허위 공시한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에 대해서는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허위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주주로 기재한 회정을 고발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해 7월 이뤄진 제재는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계열사가 대기업집단 시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허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육 과장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청년층 귀농 확산 지원 강화”

정부, 창업자금 융자규모 3000억원으로 확대

올해 청년층 귀농 확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귀농창업자금도 지난해 2000억원이었던 융자규모를 올해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청년층 귀농 확산을 비롯한 귀농귀촌 정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 귀농 장기교육' 도입,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 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 등이 포함됐다.

우선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신설해 올해 50명을 선발한다. 농림수산일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귀농창업자금은 올해 3000억원(2017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신보 우대보증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증비율은 90%에서 95%로, 지원연력은 45세에서 55세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는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정부는 귀농창업자금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에게 지원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귀농귀촌 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층 등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유입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